

직무관련 외국인 선물 반드시 신고해야

전북교육청, 미화 100달러 · 한화 10만원 이상 선물 신고 의무화 하기로

전북도교육청이 직무와 관련해 부득이 외국인에게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선물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공무원(가족 포함)은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외교 및 국제관례 등으로 외국인의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워 선물을 받은 경우에 신고대상 선물인지 여부와 선물 신고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선물 신고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선물은 미화 100달러 혹은 한화 10만원 이상이며 선물 수령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선물의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는 선물 평가단 회의를 통해 신고대상 선물인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자활참여주민 건강회복을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6일 전주신기독병원과 통합의료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활참여주민들의 건강회복 및 자활의지 향상을 위해 시전예방진료, 사후치료, 보건행방 및 예방활동 등 병원의 통합적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죽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전북대 우태규 교수, 지역산업 기여 도지사 표창

전북품질분임조 경진대회서 유공자 선정

전북대학교 우태규 교수(LINC사업단)가 전북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센터가 주관해 지난 16일 열린 '2017 전북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역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증진을 통한 산업혁신을 이끈 이에게 주는 상이다.

우 교수는 그동안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왔고 특히 지역 강소 기업과 유기적 협업체제를 구축하며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LINC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제품 파운 원인 진단 등 기업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 교수는 "사회연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신화협력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하여 지역의 우수인재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대, 우수 아이디어 보유 학생 최대 1억 원 창업 지원비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아남호)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내 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최대 1억 원의 창업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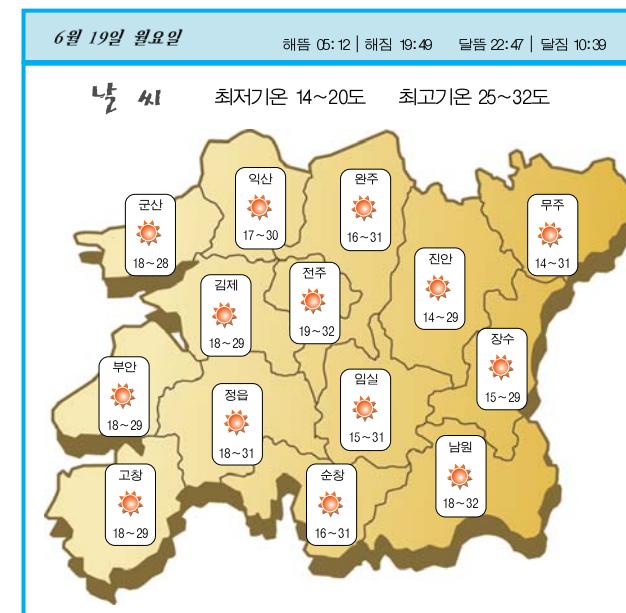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 전북대는 이 사업을 통해 창업 동아리 학생을 모집해 모두 15개 팀을 선정하고 교육과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창업동아리에는 팀당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원돼 8개월 간 실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활동 기간 중 멘토링과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창업 아이템을 고도화시키고 전북대 창업지원단의 자율프로그램인 '프리미엄' 행사와 연계해 창업 결과물을 홍보하고 시장 반응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동환 창업지원단장은 "교내에 있는 창업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평소 갖고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성공 창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통해 학생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시민 생활 속 규제 찾아 개선

전주시,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동 주민센터 규제개혁 발굴단'을 운영한다.

시는 기존의 기업투자 규제 및 신산업·신성장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은 물론, 일선 대민행정에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생활 속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행정의 최접점인 33개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규제개혁 발굴단을 구성하고, 생생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재용기자

과제 △교통·자동차·의료복지 등 생활환경불편 과제 △창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소상공인·창업 관련 규제 등 대민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

시는 발굴된 과제는 시청 담당부서 외의 협의를 거쳐 과제유형에 따라 종합부처에 건의하거나 시 자체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교육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전파로 규제개선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재용기자

업무공간 이산화탄소농도 높아 자연 환기 '중요'

업무공간의 실내 오염도는 매우 양호하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적절한 자연 환기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대한 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에 의뢰, 9개 항목에 관한 실내 공기질 측정한 결과다.

도교육청은 1층 로비와 6층(재무과), 7층(교원인사과) 등 3개 지점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 8가

지 항목은 관리기준보다 훨씬 낮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관리기준인 1,000ppm 이하에 근접한 856~911ppm으로 측정됐다. 개방 장소인 1층 로비는 426ppm으로 나타났으나 업무공간인 6층과 7층은 각각 856ppm과 911ppm으로 측정됐다.

전북산업보건센터는 자연환기를 통해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고 공기정화식물을 가꿀 것을 권장했다.

/정해은 기자

